

文 대통령 “탈 원전 국가로 나가겠다”

AIBB 연차총회 참석 “인프라 투자는 격차를 줄여서 함께 잘 살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개발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탈(脫) 원전국가로 나가겠다.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사용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B) 연차총회에서 “AIBB가 추구하는 인프라 투자방향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성장 방식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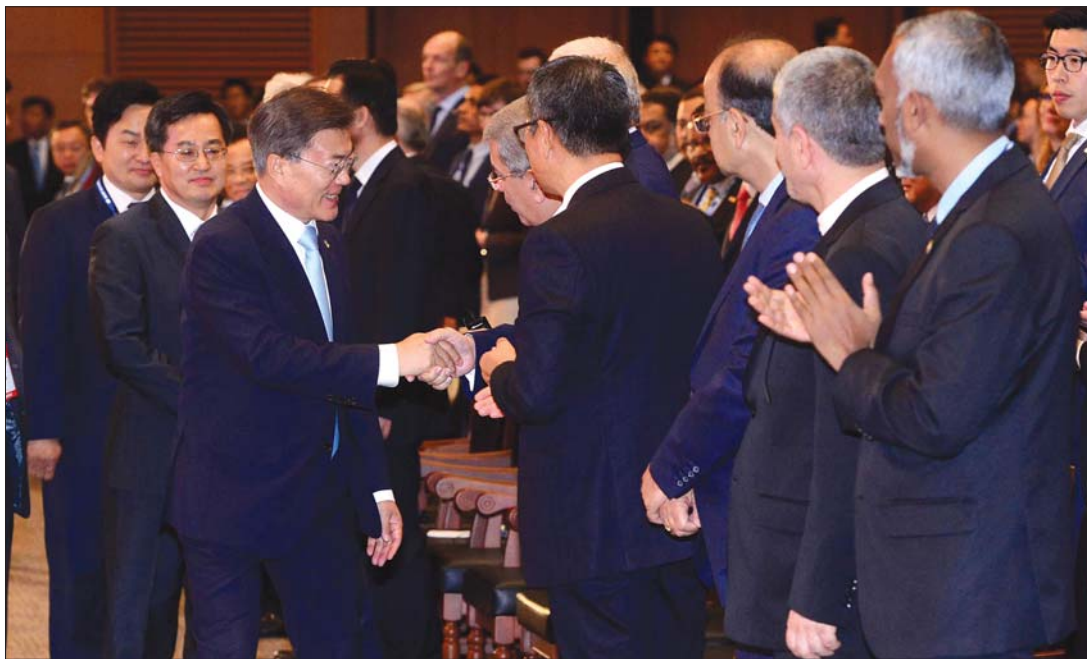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 친화적이고, 더 나아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공조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며 적극 동참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우리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경험을 AIBB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프라 투자는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위생·전기 같은 기본 인프라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며 “교통·통신 인



2017 AIBB 연차총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B) 연차총회 개최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프라는 지역 간 교류를 통해 균형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는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줄여서 함께 잘 살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며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발될 시설이 모든 사람의 접근에 용이한지, 소외된 계

층·지역·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프라 투자는 일지리를 창출한다. 인프라 구축에 수반되는 건축, 토목은 그 자체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인프라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제조업, 서비스업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고 말했다.

이어 “향후 ICT 인프라 구축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文, 김부겸·도종환·김영춘 장관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30일 신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로 전남 국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은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어 ‘현역 의원 불패’ 기록을 이어갔다.

다만 같은 날 지명됐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여당 의원이지만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와 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항의성 차원이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뉴시스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

지난해 5월 도입된 전국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가 전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올해 경영평가시 미도입기관에 부여키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43개 지방공기업 중 135개소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8곳만 미도입한 상태였다.

행자부는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키로 한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고, 재정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뉴시스

특검, ‘비선 진료 방조’ 이영선 징역 3년 구형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폰 수신탐를 개통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개인이 아니다”며 “대통령을 가장 잘 보좌해야 하는 피고인이 그 누구보다 대통령을 위태롭게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피고가 진정으로 대통령을 생각하는 공무원 자세가 있다면 3회에 걸쳐서 불출석할 수 없다.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며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행정관은 “저는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 받았고, 소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한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건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파면 통보를 받았다. 더이상 저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직권도 없어졌다”며 “하지만 저의 이런 행동으로 마음 상하신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우병우 “차탄핵 정치적 책임 느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첫 형사재판에 나와 “제가 모신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적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느낀다”며 “제가 피고인에 서게 된 것도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질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관리행방해 및 강요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서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 한탄하듯 소회를 밝혔다.

“청와대를 나온 이후 8개월 동안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지냈다”며 “지나간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며 왜 피고인에 서게 됐는지 반추했다”며 “제가 모신 대통령이 탄핵되었는데 왜 미리 살피고 예방하지 못했느냐고 국민들이 준엄한 질책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법무부,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검찰,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돈 봉투 전달·식사비 결제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논란 끝에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직 검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검찰본부는 16일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

장을 포함해 특수부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성사된 만찬이다.

이 자리에서 돈 봉투를 먼저 꺼낸 것은 안 전 검찰국장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비롯해 각 부장검사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해당 금액은 특수활동비에서 충당했다.

뒤이어 이 전 지검장도 돈 봉투를 꺼냈고, 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전달됐다. 그 돈 역시 매월 대검찰

청에서 받는 특수활동비에서 마련됐다. 이 전 지검장은 수행기사를 시켜 도합 95만원 상당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기도 했다.

합동감찰반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52·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권고를 토대로 면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도 이날 감사장계위원회를 개최,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면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여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두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검사복을 벗게 됐다. /뉴시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행복한 교실로
만들고 싶어요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장비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